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1
----------	------

발의연월일 : 2020. 7. 20.

발 의 자 : 서일준 · 김용판 · 한무경  
강민국 · 이주환 · 김정재  
지성호 · 김태흠 · 정점식  
김영식 · 홍준표 · 조수진  
백종헌 · 박진 · 조명희  
유경준 · 송언석 · 임이자  
박성중 · 김상훈 · 김승수  
의원(21인)

###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심야 취약시간대 순찰 활동 등을 통해 범죄예방과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 경찰력 부족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는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조직으로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와 상호협력 관계를 갖고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방법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현재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자율방범대에 대해 피복비·야식비 등 운영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충분한 지원에 한계가 있고, 특히 통상적인 민간봉사조직과는 달리 자율방범대는 그 활동의 특성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장비 지원이나 보험 가입 등의 적절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설치·운영하며, 자율방범대를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미성년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 등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경찰서장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자율방범대원은 방법활동 시에 방법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경찰서장등,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은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방법활동에 필요한 교육·훈련·연수를 실

시할 수 있고 경찰서장등은 방법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 8조 및 제9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방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방범대원이 방법활동을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방범활동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자율방범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신고 등) ①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설치·운영한다.

② 자율방범대를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활동구역
3. 대표자의 성명
4.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신상정보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같은 항 제4호의 구성원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④ 자율방범대는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자율방범대를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87조에 따른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위반

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②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자율방범대가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방범활동) 자율방범대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범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경찰서장등”이라 한다)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7조(복장 등) ① 자율방범대원은 제6조에 따른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때에는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신분증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교육·훈련·연수) 경찰서장등,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방법활동에 필요한 교육·훈련·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도) 경찰서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의 방법활동을 지도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의 방법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복장·장비의 구입 및 운영, 교육·훈련·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원이 방법활동을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방범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자율방범대로 본다. 다만,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